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견

| 글:홍봉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 사진: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위원회의 출범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소위 말하는 육성은 문광부가, 보호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2004년에 가출, 폭력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직할로 서울에 청소년종합보호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연차적인 전국 시·도에의 설립 계획에 의해 올해 2005년 초에 광주와 부산에도 지역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기존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그동안의 문광부의 청소년 육성업무까지도 통합한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와 동시에 광주와 부산의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도 보호라는 용어를 삭제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지원센터의 시·도에의 설립은 다른 대부분의 기구 설립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도에 대응자금의 출연을 요구하는데 이런 문제 등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본 센터의 설립이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본 센터의 전국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의 통합을 이룩한 청소년위원회의 출범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걸 맞는 지방 조직의 기능 활성화와 기존 기구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시·도의 기존 청소년상담센터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명칭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작금의 상황은 이들 기관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명칭이 개칭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청소년상담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많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급한 마음으로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의 명칭전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청소년위원회의 정책목표 및 핵심추진과제의 수행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훼손

청소년위원회는 출범당시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 된 정책목표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다루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 위험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환으로써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이러한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을 지방의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전문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은 청소년상담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의 통합적 의미와 그 실천을 대변하는 대표 용어도 그 내용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그 관계성을 말한다면 그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어의적으로 볼 때 청소년상담센터를 지원하는 부속적인 기구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상징성 부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소위 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및 행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 있어서도 그러한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상징하는 용어들의 조합이 되어야 함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센터의 명칭이 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된다면 그것은 청소년상담의 전달체계 확립을 상징하는 것이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즉각적인 개입, 보호 및 재활 등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의 존재를 상징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상담에 편중된 서비스로 인해 보호 및 재활부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약화 초래 가능성

청소년상담원 중심의 청소년상담관련 기관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각종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혁혁한 업적이 있음은 모든 관련 학계나 기관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청소년학계 등으로부터는 청소년의 통합적인 복지 증진보다는 상담자체에 보다 치중하여 왔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차 지방에 설립될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위에서 설명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야만 가능하다. 현재 청소년위원회의 정책 방향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센터의 명칭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될 경우 청소년상담사만의 혹은 청소년상담사 중심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현존하는 청소년상담원이나 지방의 청소년상담센터의 직원 구성을 보면 능히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다른 어느 방법보다 전문성이 높은 기법이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는 전술한대로 어디까지나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과 그 명칭에 의한 직원 구성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그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그들의 푸른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지의 약화 및 그 방향성에 대한 혼돈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안의 명칭과 기관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생각

명칭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선 청소년복지센터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복지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당연히 모든 청소년의 푸른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꼭 변경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복지센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이 아닌 요보호 청소년에 집중된 용어로 해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라는 용어가 보건복지부의 전용 용어로 간주하여 혼선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영·유아복지 중심의) 등은 여성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복지가 보건복지부의 전용 용어가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 증진의 다른 아닌 복지국가의 건설은 정부의 한 부처에서만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한결같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 및 목표이므로 극복적 못할 명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관련 전공에서 복지에 대한 완전 동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본다. 다학문적 접근이 필



수적이기 때문에 이웃 학문의 이러한 정서도 수용한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현재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개칭하지 않고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본 용어는 분명 청소년정책의 목적이나 목표를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나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도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러 관련 학문 명칭으로부터도 가장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한발 앞서는 의견을 감히 제시하고자 하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산하에 청소년상담실과 긴급구조실(가칭)의 두 실을 두는, 1센터 2실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런 말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상담의 큰 두 줄기가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으로 생각되는바, 새로 추가되는 긴급구조, 보호 및 재활 등의 기능은 이러한 주상담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존재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론과 기술의 심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정체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때문에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상담사는 기존의 상담 업무에 전념하고 전술한 추가적인 기능은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그 역할을 주로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공히 모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이므로 국가기관에서 누구보다 앞서 이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또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현재의 청소년상담센터는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구조, 보호, 재활 중심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각 시·도의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에 맡기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센터와 비교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관의 정체성과 동종의 경험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화는 시너지 효과가 보다 크면서 상호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